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10 Issues for SMEs in 2025

정윤정 / 한창용 / 나수미 / 김미정 / 한수민 / 선용욱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인 조 주 현

발행처 **KOSI 중소기업연구원**

(070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2

홈페이지 : <http://www.kosi.re.kr>

출판등록 제2016-000030호

I S B N 978-89-6179-543-2 (93320)

편집·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2-2683-0955

<비매품>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10 Issues for SMEs in 2025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정윤정 부연구위원

□■□

연구참여

한창용 부연구위원

나수미 연구위원

김미정 부연구위원

한수민 부연구위원

선용욱 부연구위원



2025년에는 글로벌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에서는 2025년도 경제성장의 둔화를 전망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중소기업에 미칠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2025년도 10대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국제관계,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10대 이슈 선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 주로 언급된 언론 정보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 국내외 자료들을 통해 이슈 후보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10대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2025년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정윤정 박사, 한창용 박사를 비롯한 정책컨설팅센터 박사들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준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조 주 현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요 약

1 중소기업 동향과 전망

〈 중소기업 동향 〉

- (체감 경기)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SBHI)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은 수준
 - (전산업) 77.5('24.1) → 68.1('25.1), (제조업) 81.7('24.1) → 74.0('25.1), (서비스업) 76.2('24.1) → 65.5('25.1)
- (제조업 생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02.0('24.11)로 전년 동월대비(105.3) 3.3% 하락 하였으나, 대기업은 119.1('24.11)로 전년 동월(118.2)로 0.9% 증가
- (서비스업 생산)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2.4('24.11)로 전년 동월대비(112.7) 0.3% 감소하였고, 대기업은 120.0('24.11)로 전년 동월(118.3)로 1.7% 증가
- (수출) '24. 3Q 중소기업 수출은 284억달러로 전년 동기(269억달러) 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16.3%('24.3Q)로 전년 동기(17.1%)대비 감소

〈 중소기업 전망¹⁾ 〉

- (경제상황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4.7%는 '25년 경제상황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3.0%
- (경영실적 전망)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42.2%는 '25년 경영실적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8.4%는 '24년과 비슷, 19.5%는 금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
 - (매출) '25년 매출실적에 대해 악화(47.3%) > 비슷(33.8%) > 개선 (19.0%) 순
 - (설비·장비 투자) '25년 설비·장비 투자에 대해 비슷(43.3%) > 악화(41.1%) > 개선(15.5%) 순
 - (R&D투자) '25년 R&D투자 실적은 비슷(46.7%) > 악화(40.2%) > 개선(13.0%) 순
 - (생산) '25년 생산 실적은 악화(40.4%) > 비슷(36.5%) > 개선(23.1%) 순
 - (고용) '25년 고용 관련 조사결과 비슷(47.2%) > 악화(36.6%) > 개선(16.2%) 순
 - (자금사정) '25년 자금사정은 악화(43.1%) > 비슷(40.3%) > 개선(16.6%) 순

1) '24.11.24~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리

2 중소기업 10대 이슈 선정절차

< 선정 절차 >

- 3단계를 거쳐 '2025년 10대 이슈'를 선정
 - (1단계) 뉴스키워드 분석 및 기존 문헌 검토, 전문가 FGI를 통해 분야별 이슈 후보 발굴
 - (2단계) '24.11.24~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16개 결과를 활용하여 이슈별 우선순위 도출 및 평가
 - (3단계)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진 논의를 통해 최종 10대 이슈 선정

[그림 1] 2025 중소기업 10대 이슈 선정절차

단계	(1단계) 후보이슈 발굴	(2단계) 10대 이슈(안) 선정조사	(3단계) 10대 이슈 최종 선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키워드 분석 · 기존문헌 검토 · 전문가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진의 최종검토

< 선정 결과 >

-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특징으로는 인력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필요

<표 1>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연번	이슈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	고환율 기조 지속
3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약화와 한계기업 증가
5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6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7	기업 규모 간 인력난 격차 지속
8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9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10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3 중소기업 10대 이슈

< 이슈 1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 **(현황)** 미국은 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미국의 무역·통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외교안보연구소, 2024)
 -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10~20%의 ‘보편적(universal)’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

<표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 추이

일자	주요 내용
'25.2.1.	·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중국 대상 전 품목 10% 관세 인상 발표 ·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 인상 발표
'25.2.3.	· 캐나다·멕시코 대상 행정명령(2/1) 30일 유예
'25.2.4	· 중국 대상 전 품목 10% 관세 인상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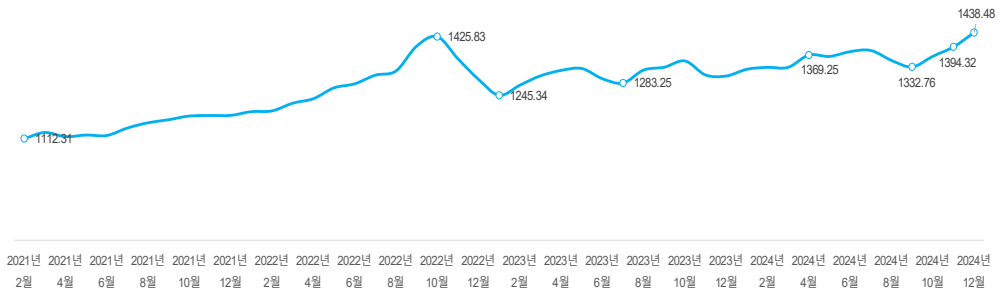
* 주: 한국무역협회(2025.2.10.)

- **(영향)**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
 - (긍정영향) 미국 정부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기대
 - 제재국의 고관세 부과로 대미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며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이 증가 가능
 - (부정영향) 중국 등 제재국의 생산 물량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유입되어 경쟁이 심화
 - 대미수출 감소는 중국 등 여타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산 중간재(재수출용) 수출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
- **(대응방향)**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중소기업은 대미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고위기술, 첨단기술 분야에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및 확대 어려움에 대비, 국가별 수출경합도 분석을 통한 전략 품목 지정 및 해외 新시장 진출 지원 확대

〈 이슈 2 〉 고회율 기조 지속

- **(현황)** 원달러 환율이 '24년 10월 2일 1,306.9원에서, 11월에는 1,309원에서 12월에는 1,450원대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그림 2]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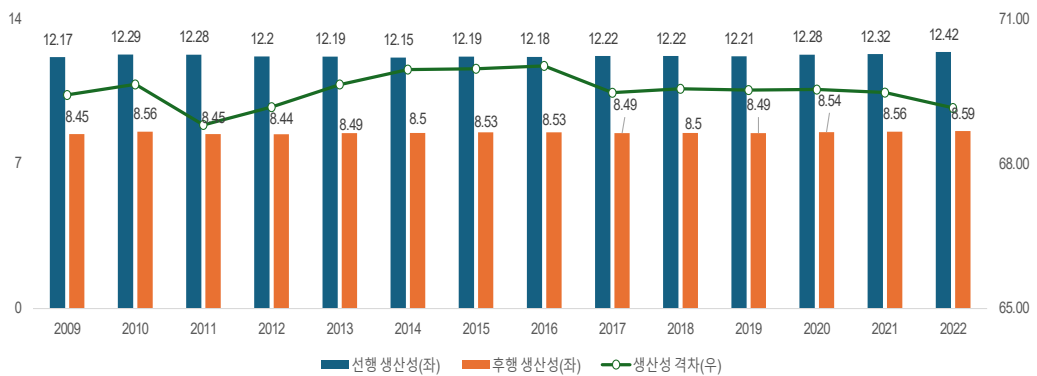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 **(영향)**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매출 개선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
 - 수출기업에게 환율상승은 가격 경쟁력을 높여 채산성 개선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영향이 60.9%, 부정적 영향은 17.4%로 조사됐으나, 수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34.9%만이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6.5%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23.8)
 -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수기업에는 원자재 수입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의 부담이 발생
- **(대응방향)** 환율 상승 국면을 활용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환변동성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은 환율 상승 국면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개선 등의 기회 확보 필요
 - 정부는 환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에 따른 일시적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지원 필요
 - 납품대금 연동체 안착 지원 및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등

〈 이슈 3 〉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 **(현황)**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내 선행기업, 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 '2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 29.0%, 서비스업 46.7% 수준
 - 중소기업 내 선행그룹은 후행그룹간 생산성 격차는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 후행그룹의 저생산성 원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OECD(2020)에 따라 추정된 연도별 평균 중소기업 생산성의 분포를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행그룹, 하위 40% 이내 기업을 후행그룹으로 정의

[그림 3] 연도별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추이(중요소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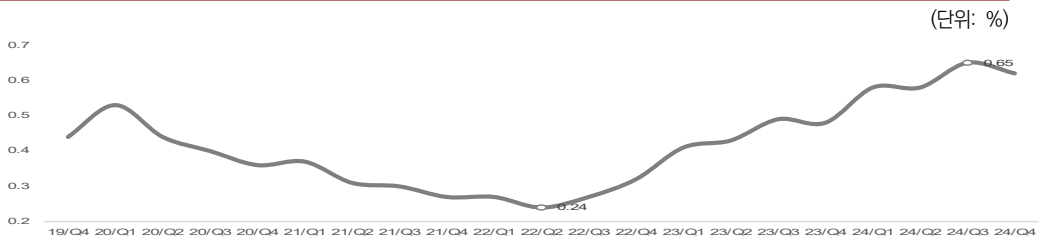


- **(영향)**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중요소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전반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
 - 선행기업의 시장 점유 확대, 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선행-후행기업 간 경쟁 저하 우려 등, 중소기업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가능 (최창호 외, 2018)
 - 중소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33% 수준에서 OECD 평균에 해당하는 50%까지 상승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GDP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OECD, 2020)
- **(대응방향)** 교육훈련 투자 및 기술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 유도
 - 중소기업은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교육훈련 투자 확대 필요
 - 정부는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이슈 4 〉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 **(현황)**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며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2년 3분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

[그림 4]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영향)**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과 고환율로 인한 기업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우려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에 영향
 -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영업 이익률은 2.11%p 및 0.55%p가 하락(한국은행, 2024)

〈표 3〉 한계기업 비중 추이

변수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4.8	15.3	14.9	15.5	16.4
대기업	10.9	11.5	12.2	12.7	12.5
중소기업	15.6	16.2	15.5	16.3	17.4

자료: 연합뉴스(2024.9.26., 한국은행 재인용)

주: 한계기업이란 3년 이상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 **(대응방향)** 회복가능한 한계기업 선별 및 만성적 한계기업 대상 구조조정 체계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등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 극복 노력 필요
 - 정부는 만성적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등 기반 마련 필요

〈 이슈 5 〉 글로벌 환경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 **(현황)**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확대됨과 동시에, 미국은 제2기 트럼프 정권에서 화석 에너지로 회귀를 발표
 - 미국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고 제조업 성장에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원 활용 등 친환경 정책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발표

〈표 4〉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구분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기초	청정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자립 및 지배력 강화
화석연료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단 연방 공유지 내 개발 엄격 제한	개발 및 증산 적극 지원
기후환경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환경보호청(EPA) 규제 강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EPA 권한 축소
원자력 발전	적극적인 원전 활용 암장	원전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SMR 개발
재생 에너지	IRA를 통해 재생공제 등 적극 지원	보조금 철회, IRA 무력화

자료: 오정석·황유선(2024)

- EU 집행위원회는 2024~29년의 우선순위 정책의제를 통해 탈탄소화 및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며 친환경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 **(영향)**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는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 수요 및 공급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원자재 가격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가가 하락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무역 장벽 심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부품, 장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게 미국 내 기업과 경쟁 심화 등 부정적 영향 가능
- **(대응방향)**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는 여전히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에너지 정책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혼합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
 - 중소기업은 글로벌 환경 정책과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과 규제 관련 정보에 주목하고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 모색
 -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기술수요 저하 우려에 따른 적극적인 수요 발굴 및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필요

〈 이슈 6 〉 대-중소기업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 **(현황)** '20~'22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신기술 기술 도입 활용에 대한 격차 확대
 - 신기술 도입률 격차는 ('20) 12.1%p → ('21) 12.4%p → ('22) 13.1%p로 확대
 - 중소기업은 AI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AI도입의 소극적

〈표 5〉 기업규모별 신기술 기술 도입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중소기업 (5인~300인 미만)	11.1	12.1	11.9
대기업 (300인 이상)	23.1	24.5	24.9
대-중소기업간 격차	12.1p	12.4p	13.1p

* 자료: 통계청, 각연도

** 주: 신기술에는 AI, IoT,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하며 각 수치는 반올림

- **(영향)** 중소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지연될 경우, 비용 절감 및 신시장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회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성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기업 규모의 장벽 극복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OECD, 2021)
 - *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하여 업무 기능의 자동화로 내부 가치사슬의 운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 기계 학습에 의한 데이터 탐색은 중소기업의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시장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켜 제품 차별화 및 시장 세분화 역량 강화에 도움
- **(대응방향)**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간 상생협업 추진방향 구체화
 -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교육 등 투자 확대
 -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제조기업-유통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방향 구체화
 - * 신기술 도입 저해 요인으로 대기업과 거래종속에 따른 주도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 한계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수요 저하 등이 꼽힘 (한국무역협회, 2023).

〈 이슈 7 〉 기업 규모간 인력난 격차 지속

- **(현황)** 중소기업(10~299인)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3년 3.0% 수준으로 대규모(500인 이상) 0.5% 대비 수준으로 격차 지속

〈표 6〉 기업 규모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중소규모 (10~299인)	현원(A)	1,089,536	1,109,295	1,121,795	1,132,587
	부족인원(B)	33,652	34,641	35,352	35,578
	부족률 (B/(A+B))	3.0	3.0	3.1	3.0
대규모 (500인 이상)	현원(A)	464,241	466,808	471,761	476,071
	부족인원(B)	1,931	2,043	2,111	2,427
	부족률 (B/(A+B))	0.4	0.4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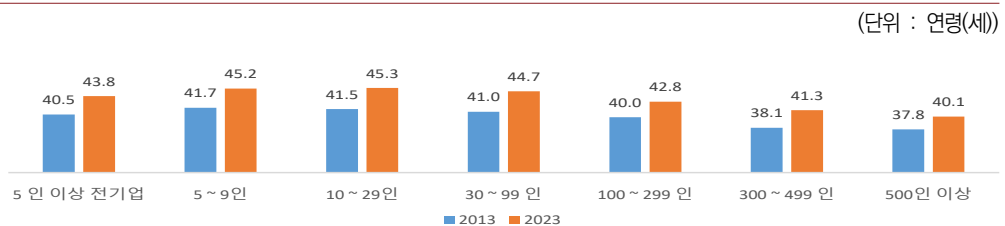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각연도)

- **(영향)**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과 잦은 이직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영향
 -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수요도 중도퇴직자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
 - * '23년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년수: 10~29인(5.2년), 30~99인(5.9년), 100~299인(7.4년) 등 (고용노동부, 2024)
 -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 채용의 사유로 중도퇴직자 증가(33.3%) 산업경기 개선(25.0%), 정년퇴직자 증가(16.7%) 순 (한국은행, 2024)
 -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애로와 높은 이직율은 중소기업의 성장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김기희, 2015)
 - * 중소기업 인재 확보의 애로와 높은 이직률 →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욕 저하 →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중소기업 성장 감소 → 중소기업 인재 확보 및 유지 애로 심화
- **(대응방향)**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
 - 중소기업은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력관리 지원 확대 및 기업환경 및 문화 개선 등을 위한 노력 강화
 -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평가제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업 문화 개선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 이슈 8 〉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 **(현황)** 기업 현장에서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 중소기업의 고령자 비중은 '23년 47.8%로 '13년(37.1%) 대비 10.7%p 증가하여 대기업 '23년 25.8%로('13년 대비 8.7%p 증가)_대비 높은 수준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종사자 평균연령이 더 높은 경향
 - * '23년 기준 5~9인규모 기업의 평균연령은 45.2세, 10~29인은 45.3세이고 300~499인 규모 기업은 41.3세, 500인 규모 평균연령 40.1세 등(고용노동부, 2024)

[그림 5] 기업 규모별 평균연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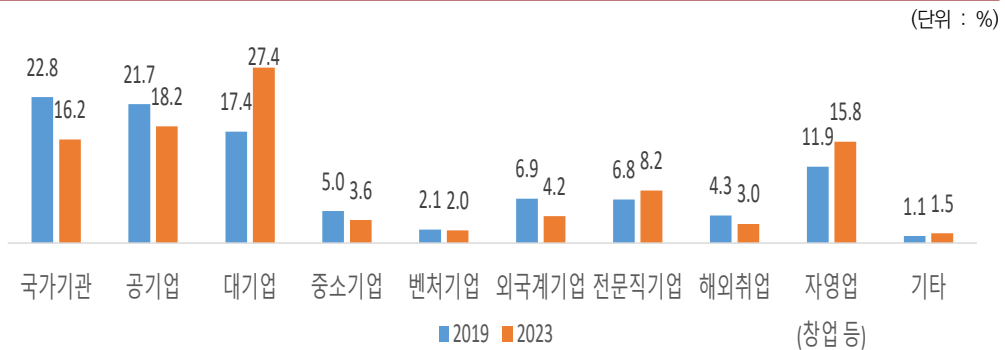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2024)

- **(영향)**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 능력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약화
 - 우리나라의 근속년수 증가(10년 →20년)에 따른 임금 상승률은 15.1%로 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OECD, 2018)
 - 세대 간 디지털 양극화는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0.3.29.).
- **(대응방향)** 고령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과 정년 연장에 대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중소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디지털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 고령화에 따른 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등 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확대 등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이슈 9 〉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현황)**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03년 기준 47.7%에서 '23년 기준 30.9%로 16.9%p 감소
 - *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0.5%에서 2023년 13.5%로 7.0%p 감소하였고, 30~39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7.2%에서 2023년 17.4%로 9.8%p 감소
 - 청(소)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5.0%('19)에서 3.6%('23)로 벤처기업은 2.1%('19)에서 2.0%('23)로 감소

[그림 6]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변화



자료: 통계청(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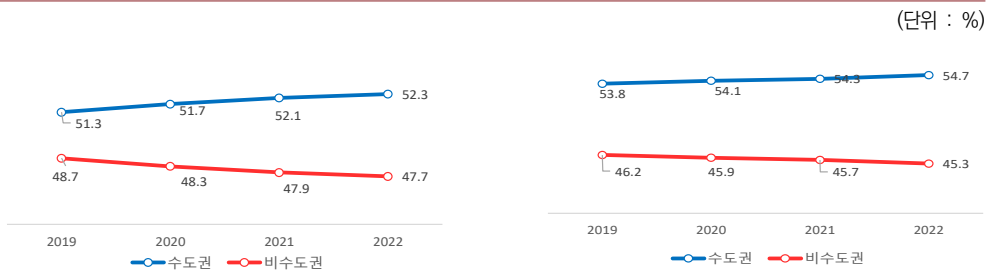
- **(영향)**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적 자본 축적 저해, 기술 경쟁력 정체 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
 - 대중소기업의 R&D 인력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의 연구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52.7%로 대기업 56.7% 대비 4%p 적은 비중
- **(대응방향)** 중소기업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지원 효과 제고
 -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수요에 맞는 유연근무 확대 적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강화
 - 정부는 청년 대상 인턴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경영혁신 활동(예: 디지털전환)과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실습 기회 제공 및 고용과 연계 방안 마련

〈 이슈 10 〉 지방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 **(현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임금수준, 상장기업, 혁신성의 격차 점차 심화

- 비수도권 기업 수 비중은 48.7%(‘19)→47.7%(‘22)로 감소, 종업원수 비중도 비수도권은 46.2%(‘19) →45.3%(‘22)로 감소

[그림 7] 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수(좌) 종사자 수(우) 비중 추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연도)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월급여 격차 (‘20) 29만원 → (‘24) 40 만원으로 확대
-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수 등 연구개발 자원 대한 격차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 * 수도권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19) 69.9% → (‘22) 70.1%. 비수도권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19) 30.1% → (‘22) 29.9%
 - * 수도권 연구원수 비중 변화: (‘19) 65.2% → (‘22) 66.9%, 비수도권 연구원수 비중 변화: (‘19) 34.8% → (‘22) 33.1%
- **(영향)** 수도권-비수도권간 경영환경 격차 확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활력 저하에 영향
 - 지역별 주력산업은 권역 간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수준
- **(대응방향)** 지역 내 주력산업에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 내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 지원이 중요
 - 지역 중소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혁신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정부는 기존의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기업 지원 체계에서 탈피,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 필요

목 차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제2장 중소기업 동향과 전망

- 1. 중소기업 동향 6
- 2. 중소기업 전망 10
- 3. 시사점 15

제3장 10대 이슈 선정 절차

- 1. 개요 18
- 2. 이슈 후보 발굴 19
- 3. 이슈별 평가 21

제4장 중소기업 10대 이슈

- 1. 10대 이슈 선정 결과 32
- 2. 10대 이슈 주요 내용 33

제5장 결론

- 1. 연구 결과 요약 54
- 2. 핵심 정책과제 56

참고문헌 58

표 목 차

〈표 2-1〉	설문조사 응답기업 현황	10
〈표 2-2〉	기업 특성별 '25년 경제상황 전망 조사결과	12
〈표 2-3〉	기업 특성별 '25년 경영 실적(종합) 전망 조사 결과	13
〈표 2-4〉	'25년 경영 실적(분야별) 전망 조사 결과	14
〈표 3-1〉	분야별 2025년 주요 이슈	19
〈표 3-2〉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후보	20
〈표 3-3〉	정치·사회 분야 응답 결과(우선순위 1순위)	21
〈표 3-4〉	경영·경제 분야 응답 결과(우선순위 1순위)	21
〈표 3-5〉	기술·환경 분야 응답 결과(우선순위 1순위)	22
〈표 3-6〉	전체 응답 상위 10위 결과	22
〈표 3-7〉	소재지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24
〈표 3-8〉	업종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25
〈표 3-9〉	기업 규모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26
〈표 3-10〉	수출 여부에 따른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27
〈표 3-11〉	연구소 보유 여부에 따른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28
〈표 3-12〉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29
〈표 4-1〉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32
〈표 4-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 추이	33
〈표 4-3〉	중소기업 수출의 對美·對中 비중 변화	33
〈표 4-4〉	중소기업 수출 파급경로와 영향	34
〈표 4-5〉	산업별-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현황(2022년)	37
〈표 4-6〉	선행그룹-후행그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38
〈표 4-7〉	한계기업 비중 추이	40
〈표 4-8〉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41
〈표 4-9〉	EU 집행위원회 2024-29 우선순위 정책의제	42
〈표 4-10〉	기업규모별 신기술 기술 도입 비율 추이	43
〈표 4-11〉	중소기업 AI 미도입 사유	43
〈표 4-12〉	중소기업 디지털기술 도입 필요성	44

〈표 4-13〉	기업 규모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추이	45
〈표 4-14〉	5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47
〈표 4-15〉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49
〈표 4-16〉	기업 규모-연령별 연구원 현황(2023년 기준)	50
〈표 4-17〉	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	52
〈표 5-1〉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55

그림 목 차

[그림 2-1]	중소기업 경기전망 SBHI 추이	6
[그림 2-2]	업종별 업황 전망 BSI 추이	7
[그림 2-3]	대-중소기업 제조업 업황 전망 BSI 추이	7
[그림 2-4]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8
[그림 2-5]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8
[그림 2-6]	중소기업 수출증감율 추이	9
[그림 2-7]	중소기업 수출비중 추이	9
[그림 2-8]	'25년 경제상황 인식 조사결과	11
[그림 2-9]	'25년 경영실적(종합) 전망 조사결과	11
[그림 3-1]	2025 중소기업 10대 이슈 발굴 절차	18
[그림 3-2]	이슈별 긍·부정 영향력 평가 결과	23
[그림 4-1]	환율 추이	35
[그림 4-2]	환율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로	35
[그림 4-3]	환율상승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36
[그림 4-4]	연도별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추이(총요소생산성)	37
[그림 4-5]	중소기업 대출잔액 추이	39
[그림 4-6]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39
[그림 4-7]	2023년 기업 규모별 근속년수	45
[그림 4-8]	기업 규모별 총 채용정원 확대 이유	46
[그림 4-9]	기업 규모별 평균연령 변화	48
[그림 4-10]	국가별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을 비교	48
[그림 4-11]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변화	49
[그림 4-12]	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수(좌) 종사자 수(우) 비중 추이	51
[그림 4-13]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평균 월 급여 추이	51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5년에는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 성장 둔화와 내수 회복의 다양한 하방 위험이 존재하여,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2.0%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2024).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 지속 역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싼 대내외 변화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개별 이슈별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슈 보고서를 취합하고, 2024년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정보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후보 이슈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중소기업의 10대 이슈를 도출하여 이슈별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025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주요 지표 동향 분석, 2025년 경제 및 경영 실적 전망, 중소기업 10대 이슈 선정 절차와 결과 제시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이슈를 개괄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경는 경제, 경영 환경에 대한 전반을 개관하고, 중소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경제, 경영환경에 대한 주요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중소기업 216개를 대상으로 2025년도 경영 실적과 전망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는 10대 이슈를 선정 절차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정 절차는 10대 이슈 선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3단계로 구성하였다. 10대 이슈 선정을 위해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노동, 환경, 국제관계, 과학기술 등의 전문가 FGI를 통해 검증하였다. 2단계로 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슈별 긍정·부정 영향력을 기업 특징별로 분석하는 등 이슈별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단계는 이슈별 우선순위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최종검토를 통해 2025년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정된 10대 이슈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이슈별 주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2025년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며, 2025년도 중소기업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제 2 장

중소기업 동향과 전망

1. 중소기업 동향
2. 중소기업 전망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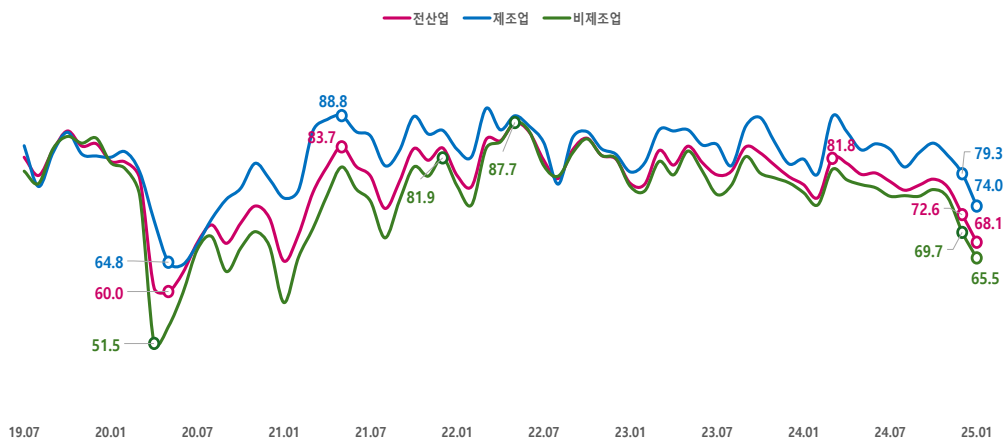
중소기업 동향과 전망

1 중소기업 동향

'25년 1월 기준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건강도지수)는 전산업 68.1, 제조업 74.0, 서비스업 65.5로 나타나 다음 달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의 경우 '25년 1월에는 68.1로 전월 대비(72.6) 4.5p, 전년 동월대비(77.5) 9.4p 하락하여 '21년 1월(65.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25년 1월 74.0으로 전월(79.3) 대비 5.3p, 전년 동월(81.7) 대비 7.7p 하락하였으며, 이는 '20.8월(7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은 '25년 1월 65.5로 전월(69.7) 대비 4.2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76.2) 대비 10.7p '21년 2월(65.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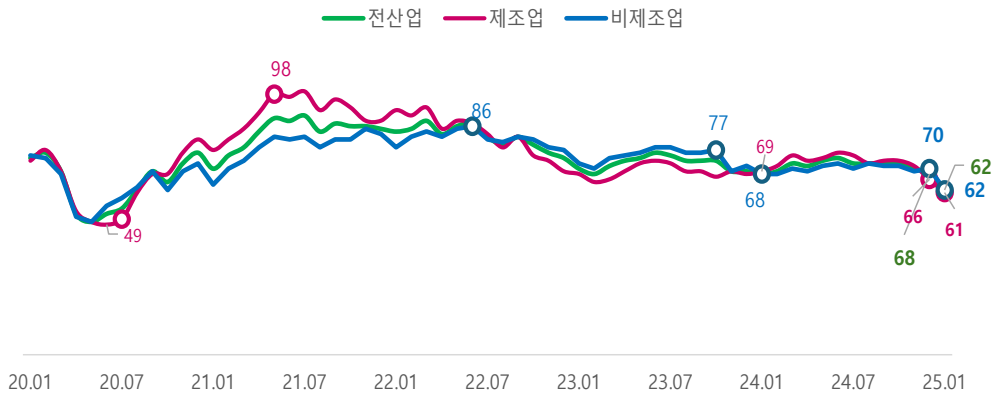
[그림 2-1] 중소기업 경기전망 SBHI 추이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5년 1월 업종별 업황 전망 BSI 추이를 살펴보면 각각 전산업 62, 제조업 61, 비제조업 62으로 나타났다. 전산업의 경우 전월(68) 대비 6P, 전년 동월(68)대비 6P 하락하였고, 제조업은 전월(66)대비 5P, 전년 동월(69)대비 8P 하락하였다. 비제조업 또한 전월(70)대비 8P, 전년 동월(68)대비 6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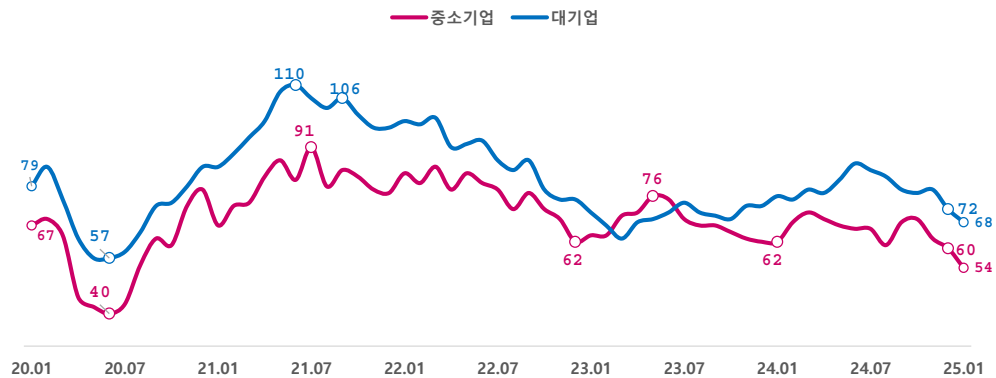
[그림 2-2] 업종별 업황 전망 BSI 추이



* 자료: 한국은행(각연도)

제조업의 대-중소기업간 업황 전망 BSI 추이를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25년 1월에는 54로 전월(60)대비 6p, 전년 동월(62) 대비 8p 하락하였고 대기업은 '25년 1월 68로 전월(72)대비 4p, 전년 동월(76)대비 8p 하락하였다.

[그림 2-3] 대-중소기업 제조업 업황 전망 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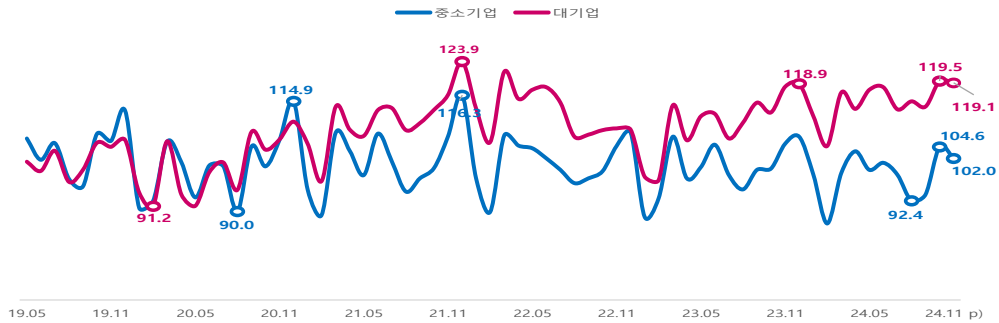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2024년도의 중소기업 생산활동 추이를 나타내는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4년 11월 102.0^p)로 전월(104.6)대비 2.6%, 전년 동월(105.3) 대비 3.3% 하락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24년 11월에는 119.1^p)로 전월(119.5)대비 0.4%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118.2)과 비교하여 0.9% 증가하였다.

[그림 2-4]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단위 : 2020=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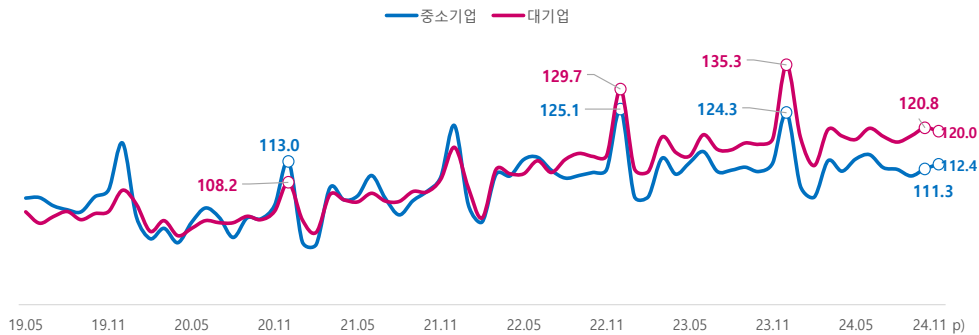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4년 11월 112.4^p)로 전월(111.3) 대비 1.1% 증가 하였으나 전년 동월(112.7)과 비교하여 0.3% 감소하였다. 대기업은 '24년 11월에 120.0^p)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118.3)과 비교 시 1.7% 증가하였다.

[그림 2-5]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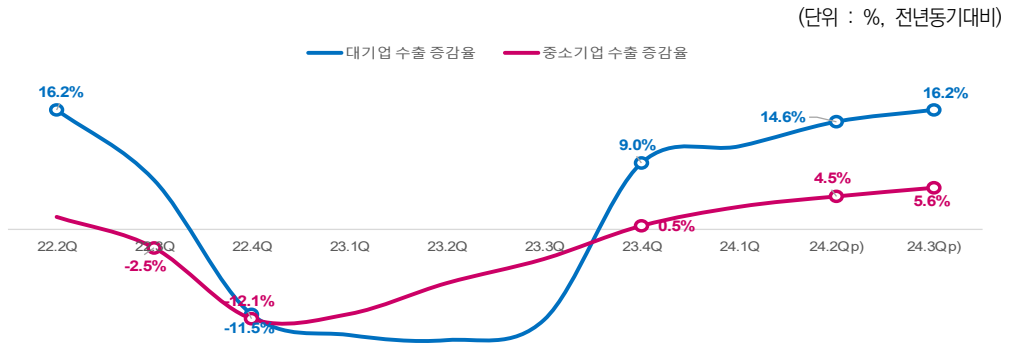
(단위 : 2020=100, %)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분기별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4년 3분기는 2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269억달러) 대비 5.6% 증가하며 '23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2%의 증가율을 보이며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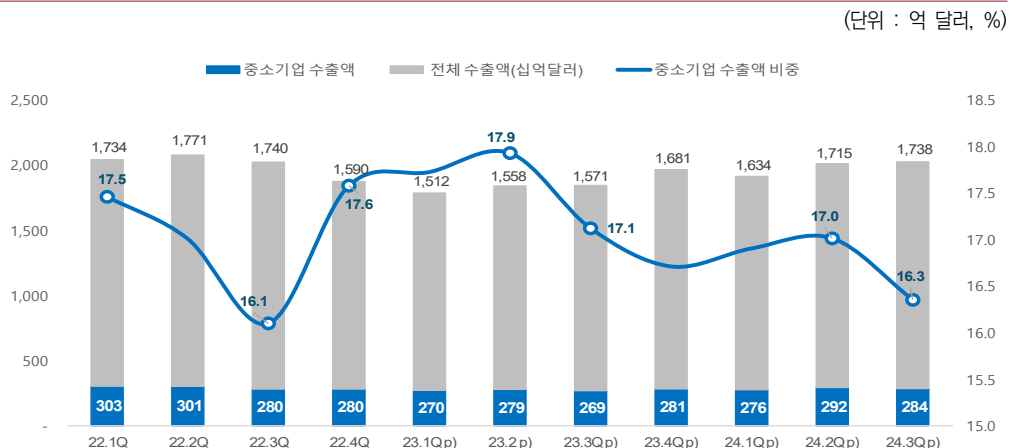
[그림 2-6] 중소기업 수출증감율 추이



* 자료: 통계청·관세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감율은 '23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체 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7.1%(23.3Q) → 16.3%(24.3Q)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3년 2분기에 17.9%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4년 3분기는 16.3%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2-7] 중소기업 수출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관세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

2 중소기업 전망

1) 조사 개요

2025년 중소기업의 경제 및 경영 전망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국내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4일~2024년 12월 3일(6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회수된 기업 수는 216개이다.

조사 결과는 소재지, 업종, 업력, 종업원 수, 수출 실적 여부, 연구소 보유 여부,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소재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그 외의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고 업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업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7년 미만)과 일반기업(7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종업원 수는 29인 이하와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2-1〉 설문조사 응답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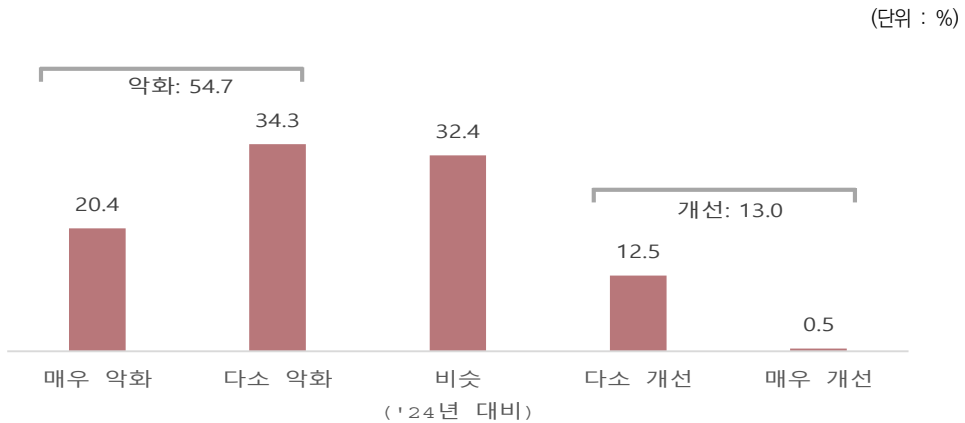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기업 수	비중
소재지	수도권	102	47.2
	비수도권	114	52.8
업종	제조업	104	48.1
	비제조업	112	51.9
업력	7년 미만	17	7.9
	7년 이상	199	92.1
종업원 수	29인 이하	125	57.9
	30명 이상	91	42.1
수출 여부	수출기업	65	30.1
	내수기업	151	69.9
연구소 여부	보유	113	52.3
	미보유	103	47.7
혁신형 중소기업 (중복선택)	벤처	64	29.6
	이노비즈	86	39.8
	메인비즈	40	18.5
	해당없음	93	43.1
합 계		216	100.0

2) 조사 결과

'25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중 54.7%는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13.0%) 대비 41.7%p 높게 나타났다. '24년과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32.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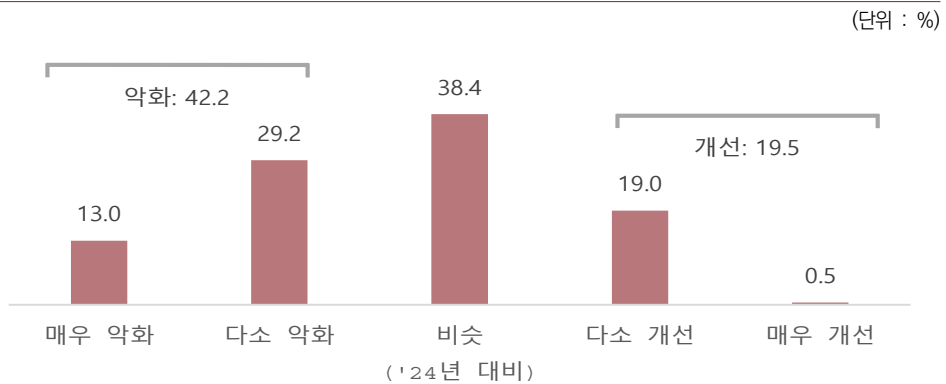
[그림 2-8] '25년 경제상황 인식 조사결과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25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중 42.2%는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19.5%) 22.7%p 높게 나타났다. '24년도와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38.4%로 나타났다.

[그림 2-9] '25년 경영실적(종합) 전망 조사결과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소재지별로 '25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비수도권 57.9%, 수도권 51.0%로 나타났다. '24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비수도권 31.6%, 수도권 33.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55.3%, 제조업 53.9%은 '25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비제조업 33.0%, 제조업 31.7%은 '24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기업 56.1%와 29인 이하 53.6%는 '24년 대비 '25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30인 이상 기업 29.7%, 29인 이하 기업 34.4%는 '24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출 유무별로는 내수기업 55.0%와 수출기업 53.8%는 '24년 대비 '25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내수기업 33.1%, 수출기업 30.8%은 '24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소 유무별로는 미보유기업 55.3%. 보유 기업 54.0%이 '25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55.9%와 혁신형 중소기업 중 53.7%는 '25년 경제상황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2〉 기업 특성별 '25년 경제상황 전망 조사결과

(단위 : 개, %)

구분		기업 수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비슷 ('24년 대비)	다소 개선	매우 개선	합계
소재지	수도권	102	19.6	31.4	33.3	14.7	1.0	100.0
	비수도권	114	21.1	36.8	31.6	10.5	0.0	100.0
업종	제조업	104	18.3	35.6	31.7	13.5	1.0	100.0
	비제조업	112	22.3	33.0	33.0	11.6	0.0	100.0
종업원	29인 이하	125	22.4	31.2	34.4	11.2	0.8	100.0
	30인 이상	91	17.6	38.5	29.7	14.3	0.0	100.0
수출여부	수출기업	65	21.5	32.3	30.8	13.8	1.5	100.0
	내수기업	151	19.9	35.1	33.1	11.9	0.0	100.0
연구소 보유여부	보유	113	19.5	34.5	31.9	14.2	0.0	100.0
	미보유	103	21.4	34.0	33.0	10.7	1.0	100.0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	123	19.5	34.2	31.7	14.6	0	100.0
	미해당	93	21.5	34.4	33.3	9.7	1.1	100.0
전체		216	20.4	34.3	32.4	12.5	0.5	100.0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소재지별로 '25년 경영실적(종합) 전망에 대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비수도권 43.9%, 수도권 40.2%로 나타났다. '24년과 비교하여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비수도권 39.5%, 수도권 37.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5년 경영실적(종합)' '24년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제조업 42.3%, 비제조업 42.0%로 나타났다. '24년과 비교하여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제조업 34.6%, 비제조업 42.0%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기업 42.9%, 29인 이하 41.6%가 '24년 대비 '25년 경영실적(종합)'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24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0인 이상 36.3%, 29인 이하 40.0%로 나타났다. 수출 유무별로는 내수기업 43.8%, 수출기업 38.4%가 '25년 경영실적(종합)'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24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내수기업 37.7%, 수출기업 40.0%로 나타났다. 연구소 미보유기업은 44.7%가 연구소 보유 기업은 39.8%가 '25년 경영실적(종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 43.1% 비혁신형 중소기업 기업 40.9%는 '25년 경영실적(종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3〉 기업 특성별 '25년 경영 실적(종합) 전망 조사 결과

(단위 : 개, %)

구분		기업 수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비슷 ('24년 대비)	다소 개선	매우 개선	합계
소재지	수도권	102	13.7	26.5	37.3	21.6	1.0	100.0
	비수도권	114	12.3	31.6	39.5	16.7	0.0	100.0
업종	제조업	104	14.4	27.9	34.6	22.1	1.0	100.0
	비제조업	112	11.6	30.4	42.0	16.1	0.0	100.0
종업원	29인 이하	125	12.8	28.8	40.0	17.6	0.8	100.0
	30인 이상	91	13.2	29.7	36.3	20.9	0.0	100.0
수출여부	수출기업	65	16.9	21.5	40.0	20.0	1.5	100.0
	내수기업	151	11.3	32.5	37.7	18.5	0.0	100.0
연구소 보유여부	보유	113	12.4	27.4	38.9	21.2	0.0	100.0
	미보유	103	13.6	31.1	37.9	16.5	1.0	100.0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	123	12.2	30.9	35.8	21.1	0.0	100.0
	미해당	93	14.0	26.9	41.9	16.1	1.1	100.0
전체		216	13.0	29.2	38.4	19.0	0.5	100.0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25년 분야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출실적의 경우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7.3%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4년 대비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3.8%로 나타났다. '24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9.0%로 나타났다.

설비·장비 투자 실적의 경우 '24년 대비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4년 대비 '25년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이 41.1%로 나타났다. '24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5.5%로 나타났다.

R&D 투자 실적은 '24년 대비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0.2%로 나타났다.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3.0% 비중으로 나타났다. 생산 실적은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이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4년 대비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 36.5%,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2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실적의 경우 '24년 대비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36.6%,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에 대해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이 43.1%, '24년 대비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0.3%,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 1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25년 경영 실적(분야별) 전망 조사 결과

(단위 : 개, %)

구분	기업 수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비슷 ('24년 대비)	다소 개선	매우 개선	합계	
매출	216	14.4	32.9	33.8	18.1	0.9	100	
투자	설비·장비	180	10.0	31.1	43.3	13.3	2.2	100
	R&D	169	11.8	28.4	46.7	12.4	0.6	100
생산	104	9.6	30.8	36.5	22.1	1.0	100	
고용	216	9.3	27.3	47.2	15.7	0.5	100	
자금사정	216	13.0	30.1	40.3	15.7	0.9	100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분야별 해당 응답기업수는 '기업수' 항목에 표기, 비중 수치는 반올림

3 시사점

중소기업의 '25년 업황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전망(SBHI)의 경우 전산업은 77.5('24.1) → 68.1('25.1), 제조업 81.7('24.1) → 74.0('25.1), 서비스업 76.2('24.1) → 65.5('25.1)로 하락하였다. 업종별 업황 전망 BSI 추이를 보면 전산업은 68('24.1) → 62('25.1), 제조업 69('24.1) → 61('25.1), 비제조업 68('24.1) → 62('25.1)으로 모두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은 '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24년 11월 102.0^p)으로 전월(104.6^p)대비 2.6% 하락, 서비스업의 생산지수 또한 107.4('24.1) → 114.6('24.6) → 112.4^p('24.11) '24년도 하반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도 축소로 전환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성장률은 0.5%('23.4Q) → 5.6%^p('24.3Q)로 상승하였으나, 대기업 9.0%('23.4Q) → 16.2%^p('24.3Q)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3년 3분기(17.1%)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4년 3분기에는 16.3%로 축소되었다.

5인이상 2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5년도 경제상황과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중소기업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54.7%가, '25년도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 42.2%가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경영실적 전망의 경우, 악화될 것라는 응답비중이 높은 분야는 매출 실적(47.3%), 생산 실적(40.4%), 자금사정(43.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25년도에는 장단기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활동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성장 둔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제 3 장

10대 이슈 선정 절차

1. 개요
2. 이슈 후보 발굴
3. 이슈별 평가

제3장

10대 이슈 선정 절차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2025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1단계는 10대 후보 이슈를 발굴하는 단계로 정치·사회·경영·경제·기술·환경 분야의 '24년 뉴스기사 키워드 분석 및 '25년 전망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25년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주요 이슈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후보 이슈를 선별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추진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별된 이슈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슈별 긍정·부정 영향력을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이슈를 선별하기 위해 추진된 설문조사는 국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4일~2024년 12월 3일(6일간) 실시하여 회수된 216개 결과를 활용하였다.

3단계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야별/이슈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최종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그림 3-1] 2025 중소기업 10대 이슈 발굴 절차

단계	(1단계) 후보 이슈 발굴	(2단계) 이슈별 우선순위 선정	(3단계) 10대 이슈 최종 선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 키워드 분석· 기존 문헌 검토· 전문가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진의 최종 검토

2 이슈 후보 발굴

1단계 후보 이슈 발굴 단계에서는 뉴스 키워드 분석으로 2024년 주요 현안 이슈를 파악하였다. 2024.01.01.~2024.11.09. 기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국내 언론 보도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중소기업’, ‘창업’, ‘벤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뉴스 기사의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분야별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제·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근로자, 육아휴직, 지역화폐등과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AI 및 반도체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였다. IT·과학 분야에서는 AI, 온라인, 클라우드 등이 상위 키워드에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25년의 경영·경제·기술 전망 및 이슈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슈를 취합하였다(하나금융연구소, 2024; 포브스, 2024; 세계경제포럼, 2020). 기존 문헌에서 도출된 이슈는 정치/사회 분야의 정년제도 개선,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 대내 요인과 글로벌 미국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대외요인이 포함되었다. 경제/경영분야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산업양극화 심화 등 대내 요인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요인이 포함되었다. 기술/환경 분야는 AI 활용 확대와 같은 대내요인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 기후변화대처 기술 확산 등과 같은 대외요인이 포함되었다.

〈표 3-1〉 분야별 2025년 주요 이슈

구분	정치/사회	경제/경영	기술/환경
대내 요인 (국내이슈)	① 지역화폐법 폐기 ② 반도체-인공지능(AI)법 발의 논의 본격화 ③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지원 확대 ④ 정년제도 개선 논의 ⑤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① 완만한 경제성장 전망 ② 반도체 등의 일부 산업에 의존한 산업양극화 심화 ③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④ 중소기업 재무인정성악화 지속 ⑤ 소비양극화 심화 ⑥ 티메프 사태로 인한 온라인 판매 위축 우려	① 탈탄소화 촉진 ② AI 기술 도입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③ 경영환경에서 AI 도입 본격화 ④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 재편 가속
대외 요인 (글로벌 이슈)	⑥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 ⑦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 ⑧ EU AI법 제정 ⑨ 글로벌 패권 경쟁 변화	⑦ 중국발 공급과잉 부각 ⑧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 ⑨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금리인하 기조 ⑩ 미국 통상정책 변화	⑤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 ⑥ 인더스트리 5.0 시장 성장 ⑦ 기후 변화 대처 기술 확산 ⑧ ESG 공시 의무화 ⑨ 글로벌 친환경 규제 변화

* 자료: 보도자료 키워드 분석 및 2025 관련 이슈 보고서 취합

뉴스 키워드 분석과 기존 문헌에서 도출된 2025년 주요 이슈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FGI를 추진하였다. 서면 FGI¹⁾는 기 도출된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중요성과 적절성, 시의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였고, 의미 중복과 용어 등을 재정리하여 24개의 10대 이슈 후보를 도출하였다.

〈표 3-2〉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후보

정치/사회	① 정년제도 개선 논의 확대
	②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등 격차 확대
	③ 지방소멸 위기 지속
	④ 중소기업 생산인구 감소 등 인력부족 현상 심화
	⑤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확대
	⑥ 청년 창업/고용 정책 확대
	⑦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지원 확대
	⑧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규제 변화(EU의 AI법 등)
경영/경제	⑨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금리인하 기조
	⑩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등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
	⑪ 고환율 기조 지속
	⑫ 리쇼어링 트렌드에 따른 국내 생산 활성화 압박
	⑬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⑭ 이커머스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온라인 시장 침체(ex. 티메프 사태 등)
	⑮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공세 심화(알리/테무/쉬인 등)
	⑯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술/환경	⑰ 글로벌 탈탄소화와 친환경 규제 준수 요구의 증가
	⑱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 등 친환경 규제 변화
	⑲ 기후 적응기술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증대
	⑳ AX/DX 도입의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㉑ 산업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 가속화
	㉒ 희소금속 확보, 에너지 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㉓ 글로벌 기술주권 중요성 강화 등 기술경쟁 가속
	㉔ 플랫폼 경제성장과 독립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프라 필요성 증대

1) 노동/과학기술/경제금융/환경/국제관계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 11월 11일~2024년 11월 20일(7일간) 실시

3 이슈별 평가

1) 우선순위 평가

정치·사회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이슈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등 격차 확대로 전체 27.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인구 감소 등 인력부족 현상 심화(24.1%), 정년제도 개선 논의 확대(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정치·사회 분야 응답 결과(우선순위 1순위)

(단위 : 개, %)

순위	항목	응답수	비중
1	②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등 격차 확대	60	27.8
2	④ 중소기업 생산인구 감소 등 인력부족 현상 심화	52	24.1
3	① 정년제도 개선 논의 확대	27	12.5
4	③ 지방소멸 위기 지속	26	12.0
4	⑥ 청년 창업/고용 정책 확대	26	12.0
6	⑦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지원 확대	11	5.1
7	⑧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규제 변화(EU의 AI법 등)	10	4.6
8	⑤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확대	4	1.9
합계		216	100.0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가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24.1%), 고환율 기조 지속(2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경영·경제 분야 응답 결과(우선순위 1순위)

(단위 : 개, %)

순위	항목	응답수	비중
1	⑤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55	25.5
2	②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등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	52	24.1
3	③ 고환율 기조 지속	45	20.8
4	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금리인하 기조	28	13.0
5	⑧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3	10.6
6	⑥ 이커머스 기업의 유통성 위기로 인한 온라인 시장 침체(ex. 티메프 사태 등)	6	2.8
7	⑦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공세 심화(알리/테무/쉬인 등)	5	2.3
8	④ 리쇼어링 트렌드에 따른 국내 생산 활성화 압박	2	0.9
합계		216	100.0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산업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와 사업재편 가속화가 1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글로벌 탈탄소화와 친환경 규제 준수 요구의 증가(13.4%),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 등 친환경 규제 변화가 9.3%로 나타나 글로벌 환경 관련 정책 변화가 상위 2위와 3위로 차지하였다.

〈표 3-5〉 기술·환경 분야 응답 결과(우선순위 1순위)

(단위 : 개, %)

순위	항목	응답수	비중
1	⑤ 산업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와 사업 재편 가속화	47	15.7
2	① 글로벌 탈탄소화와 친환경 규제 준수 요구의 증가	38	13.4
3	②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 등 친환경 규제 변화	34	9.3
4	⑦ 글로벌 기술주권 중요성 강화 등 기술경쟁 가속	29	8.3
5	④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20	7.9
6	⑧ 플랫폼 경제성장과 독립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프라 필요성 증대	18	6.0
7	③기후 적응기술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증대	17	2.3
8	⑥ 희소금속 확보, 에너지 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13	0.9
합계		216	100.0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전체 항목 대상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슈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등 격차 확대(22.3%),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 심화(19.5%), 지방소멸 위기 지속(9.0%)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정년제도 개선 논의 확대(6.6%), 고환율 기조 지속(6.6%) 등의 이슈가 포함되었다.

〈표 3-6〉 전체 응답 상위 10위 결과

순위	항목	응답수 (1+2순위 합산)
1	④ 중소기업 생산인구 감소 등 인력부족 현상 심화	81
2	②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등 격차 확대	73
3	⑬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48
4	⑪ 고환율 기조 지속	44
5	③ 지방소멸 위기 지속	31
6	⑩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등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	24
7	① 정년제도 개선 논의 확대	22
8	⑥ 청년 창업/고용 정책 확대	20
9	⑯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0
10	⑦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지원 확대	16

* 주: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2) 이슈별 영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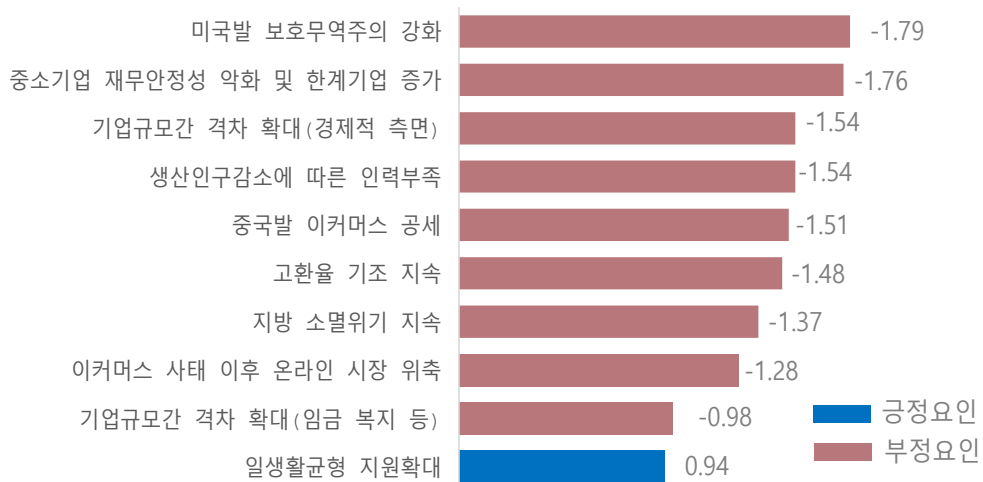
이슈별 영향력 평가는 24개의 10대 이슈 후보가 2025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이슈 후보들의 긍·부정 영향 평가는 부정적 영향(-5점 ↔ -1점)과 보통(0점), 긍정적 영향(+1점 ↔ +5점)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24개의 이슈 후보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이슈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1.79점)로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이슈로 꼽혔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1.76점), 기업 규모간 격차 확대(-1.54점) 등 경제·경제 분야의 이슈 후보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분야에서는 생산인구 감소(4위)가 -1.54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이슈로 나타났고, 지방소멸위기 지속(7위, -1.37점), 임금·복지 등 기업 규모간 격차확대(9위, -0.98) 등이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이슈에 포함되었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는 일생활균형 지원확대가 0.94점으로 10위 내에 포함되었다.

[그림 3-2] 이슈별 긍·부정 영향력 평가 결과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으로 영향력 확인, 그래프 크기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이며 긍정(+)/부정(-) 여부는 색깔로 구분하여 표기

소재지별로 이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2.0점으로 부정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무 안정성 악화(-1.94점),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1.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은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악화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각각 -1.61점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하였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1.51점), 지방 소멸 위기 지속과 기업 규모간 격차 확대가 각각 -1.47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은 공통적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평가하였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 지속은 상위 4위(-1.47점)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평가하였지만, 수도권 기업의 경우 8위(-1.25점)에 그쳤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기업은 일 생활 균형 지원 확대(10위, 1.05점)를 꼽은 반면, 비수도권 기업은 청년 고용정책 확대 이슈(8위, 1.06점)를 꼽았다. 비수도권 기업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이슈를 상위 3위(-1.51점)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평가하였으나, 수도권 기업의 경우 6위로(-1.57점) 비수도권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력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3-7〉 소재지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단위 : 점)

순위	수도권		비수도권	
	이슈	영향력	이슈	영향력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00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61
2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9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61
3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75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51
4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62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47
5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62	지방 소멸위기 지속	-1.47
6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57	고환율 기조 지속	-1.42
7	고환율 기조 지속	-1.55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30
8	지방 소멸위기 지속	-1.25	청년 고용정책 확대	+1.06
9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규제	-1.13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 복지 등)	-1.02
10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1.05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0.98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순위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으로 평가

업종별로 이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제조기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1.91점으로 부정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측면)(-1.64점),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1.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악화가 -1.91점으로 부정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1.68점),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1.63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이슈들을 비교해보면, 제조기업은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가 -0.94점(9위)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제조 기업은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가 +1.04점(10위)으로 긍정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는 제조 기업(3위, -1.62점)이 비제조 기업(7위, -1.41점)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이슈는 비제조 기업(3위, -1.63점)으로 제조 기업(5위, -1.43점)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업종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단위 : 점)

순위	제조업		비제조업	
	이슈	영향력	이슈	영향력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91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91
2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64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68
3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62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63
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61	고환율 기조 지속	-1.60
5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43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45
6	고환율 기조 지속	-1.36	지방 소멸위기 지속	-1.41
7	지방 소멸위기 지속	-1.33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41
8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15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40
9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0.94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복지 등)	-1.11
10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복지 등)	-0.85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1.04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순위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으로 평가

기업규모별로 이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29인 이하 기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1.99점으로 부정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무안정성 악화(-1.82점),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1.74점) 순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기업은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가 -1.68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1.52점),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1.47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이슈들을 비교해보면, 29인 이하는 임금, 복지 등 기업 규모간 격차 확대가 -0.94점(9위)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인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0.86점(9위)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이슈는 29인 이하(3위, -1.74점)에서 30인 이상(6위, -1.25점)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는 30인 이상 3위(-1.47점)이 29인 이하 6위(-1.54점)에 비해 영향력의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 기업 규모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단위 : 점)

순위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슈	영향력	이슈	영향력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99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68
2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82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52
3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74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47
4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71	고환율 기조 지속	-1.41
5	고환율 기조 지속	-1.54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31
6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54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25
7	지방 소멸위기 지속	-1.46	지방 소멸위기 지속	-1.24
8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32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23
9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 복지 등)	-1.1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0.86
10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1.00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0.85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순위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으로 평가

수출 여부에 따라 이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수출 기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2.31점으로 부정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무 안정성 악화(-2.18점),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2.05점)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기업은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악화가 -1.58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1.57점),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1.46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이슈들을 비교해보면, 수출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9위, -1.18점),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규제 확대(10위, -1.14점)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수기업은 청년 고용정책 확대(9위, +1.03점), 일생활 균형 지원확대(10위, +0.09점)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고환율기조 지속의 경우 내수기업은 -1.44점으로 4위에 위치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이슈로 나타났으나, 수출기업은 8위(-1.58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수출 여부에 따른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단위 : 점)

순위	수출 기업		비수출 기업	
	이슈	영향력	이슈	영향력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31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58
2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2.18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57
3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2.05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46
4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2.05	고환율 기조 지속	-1.44
5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71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32
6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69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28
7	지방 소멸위기 지속	-1.66	지방 소멸위기 지속	-1.25
8	고환율 기조 지속	-1.58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11
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1.18	청년 고용정책 확대	+1.03
10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규제 확대	-1.14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0.98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순위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으로 평가

연구소 유무별 이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연구소 보유기업은 재무안정성 악화가 -1.91점으로 부정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1.83점),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1.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미보유기업은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악화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각각 -1.61점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하였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1.51점), 지방 소멸 위기 지속과 기업 규모간 격차 확대가 각각 -1.47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이슈들을 비교해 보면, 연구소 보유기업은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가 -0.95점(10위)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소 미보유기업은 일생활 균형 지원확대가 +1.00점(9위)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에 포함되었다.

이슈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이슈는 연구소 미보유기업에는 2위(-1.67점)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로 나타났으나, 연구소 보유기업에는 7위(-1.42점)으로 비교적 영향력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연구소 보유 여부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단위 : 점)

순위	연구소 보유기업		연구소 미보유 기업	
	이슈	영향력	이슈	영향력
1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9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75
2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83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67
3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62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60
4	고환율 기조 지속	-1.60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51
5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57	지방 소멸위기 지속	-1.41
6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54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39
7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42	고환율 기조 지속	-1.35
8	지방 소멸위기 지속	-1.34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00
9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복지 등)	-1.04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1.00
10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0.95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복지 등)	-0.92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규제	-0.92
			청년 고용정책 확대	+0.92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순위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으로 평가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이슈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가 -2.13점으로 부정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1.93점),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1.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혁신형 중소기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각각 -1.60점으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1.40점), 고환율 기조 지속(-1.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이슈들을 비교해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가 -1.02점(10위)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에 포함되었고 비혁신형 중소기업은 일생활균형 지원확대(6위, +1.26점), 청년 고용정책 확대(10위, +1.05점)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은 이슈에 포함되었다.

이슈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고환율 기조지속의 경우, 비혁신형 중소기업은 -1.34점(3위)로 부정적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이슈로 나타났으나,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1.59점(6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재무안정성 악화이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2.13점(1위)로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이슈로 나타났으나, 비혁신형 중소기업에는 -1.28점으로 5번째로 나타났다.

〈표 3-12〉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별 이슈 영향력 평가 상위 10위 결과

(단위 : 점)

순위	혁신형 중소기업		비혁신형 중소기업	
	이슈	영향력	이슈	영향력
1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2.13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60
2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1.93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40
3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75	고환율 기조 지속	-1.34
4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70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1.32
5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경제적 측면)	-1.65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1.28
6	고환율 기조 지속	-1.59	일생활균형 지원확대	+1.26
7	지방 소멸위기 지속	-1.55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1.19
8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46	지방 소멸위기 지속	-1.13
9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임금, 복지 등)	-1.13	이커머스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위축	-1.05
10	AX/DX 도입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1.02	청년 고용정책 확대	+1.05

* 주: 매우 부정적(-5점) → 보통(0점) → 매우 긍정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순위는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 기준으로 평가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제 4 장

중소기업 10대 이슈

1. 10대 이슈 선정 결과
2. 10대 이슈 주요 내용

제4장

중소기업 10대 이슈

1 10대 이슈 선정 결과

최종 10대 이슈 도출에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상위 이슈와 전체 24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위 10위 이슈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10개의 이슈를 도출하였다.

〈표 4-1〉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연번	이슈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	고환율 기조 지속
3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5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6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7	기업 규모 간 인력난 격차 지속
8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9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10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최종 10대 이슈에는 정치·사회 분야에는 인력 관련 이슈로 기업 규모 간 인력난 격차 지속,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등 인력 관련 이슈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포함하여 4개의 이슈가 선정되었다. 경제·경영 분야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고환율 기조 지속,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4개가 포함되었다. 기술·환경 분야에는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등 2개의 이슈가 포함되었다.

2 10대 이슈별 주요 내용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은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24.11.6.)되며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이효영, 2024). 구체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에 10~20%의 '보편적(universal)'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The Washington Post, 2024.1.27.).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 캐나다·멕시코에는 25% 관세인상을 발표하였으나 유예하였고 중국은 전품목 10% 관세인상을 단행하였다.

〈표 4-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 추이

일자	주요 내용
'25.2.1.	·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중국 대상 전 품목 10% 관세 인상 발표 ·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 인상 발표
'25.2.3.	· 캐나다·멕시코 대상 행정명령(2/1) 30일 유예
'25.2.4	· 중국 대상 전 품목 10% 관세 인상 발효

* 주: 한국무역협회(2025.2.10.)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은 '17년 전체 수출액 대비 21.6%를 차지하였으며 '23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7년 11.1%로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4년에는 16.3%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표 4-3〉 중소기업 수출의 對美·對中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 국	수출액	22,329	24,780	23,248	22,735	23,887	21,498	18,625	18,390
	비중(순위)	21.6(1)	23.6(1)	23.0(1)	22.6(1)	20.7(1)	18.8(1)	17.0(1)	16.0(2)
미 국	수출액	11,478	12,094	11,861	12,873	14,685	16,255	16,859	18,744
	비중(순위)	11.1(3)	11.5(2)	11.8(2)	12.8(2)	12.7(2)	14.2(2)	15.4(2)	16.3(1)
전체 수출액		103,209	105,196	100,928	100,712	115,480	114,458	109,699	115,067

* 주: 2017~2023년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동향」(각연도) 자료를 참고하였고, 2024년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1.23.)를 인용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국 정부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제재국의 고관세 부과로 대미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며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중국 등 제재국의 생산 물량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유입되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대미수출 감소는 중국 등 여타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산 중간재(재수출용) 수출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4-4〉 중소기업 수출 파급경로와 영향

美 관세 정책	중소기업 수출에의 파급	영향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인상	제재국의 對美 수출감소→한국산 제품으로 대체→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	긍정
	제재국의 對美 수출감소→제재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對中·여타국 통한 한국산 중간재(재수출용) 수출 감소	부정
보편관세 부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한국의 對美 수출 감소	부정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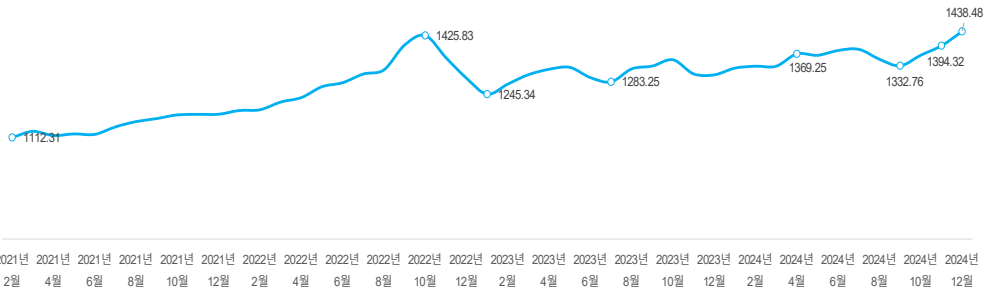
이에 따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적인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별 수출경합도 분석을 통한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新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중국 등 미국의 제재국에 해당하는 국가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가격경쟁력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전자기기, 기계류 등 중고위기술, 첨단기술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2) 고회율 기조 지속

원달러 환율이 '24년 10월 2일 1,306.9원에서, 11월에는 1,309원에서 12월에는 1,450원대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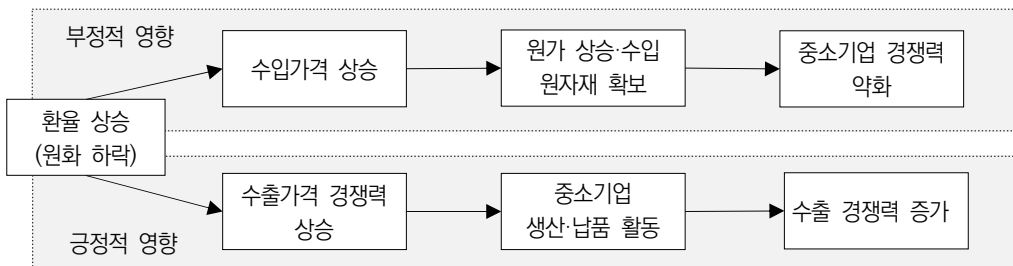
[그림 4-1] 환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는 매출 개선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에게 환율상승은 가격 경쟁력을 높여 채산성 개선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수기업에는 원자재 수입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2] 환율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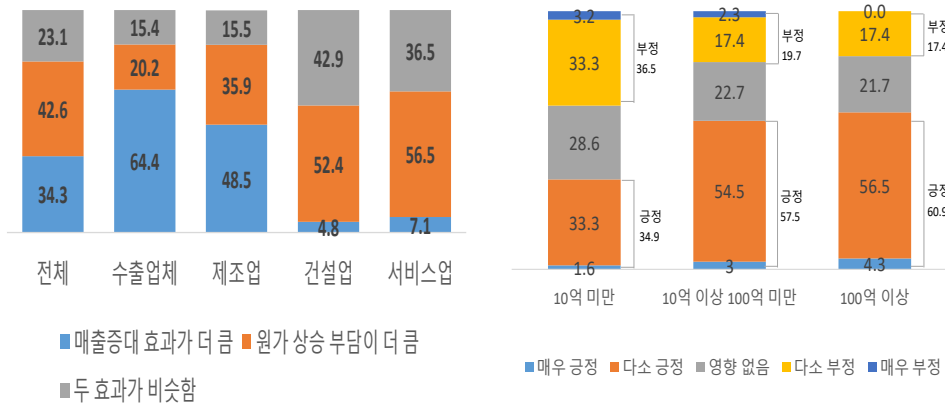


자료: 홍성철 외(2022;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22.8.29 재인용)를 참고하여 재작성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환율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원가상승 부담이 더 크다는 의견이 42.7%로 매출증대 효과(34.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2). 수출기업의 경우 수익측면(매출증대)의 효과가 64.4%로 비용측면(원가상승)

20.2%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영향이 60.9%, 부정적 영향은 17.4%로 조사됐으나, 수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34.9%만이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6.5%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23.8).

[그림 4-3] 환율상승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주: (좌) 한국은행(2022)을 참고하였으며, 조사결과는 2022년 11월 10~30일 327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 중소기업중앙회(2023.8)를 참고하였으며, 조사는 2023년 8월24~29일,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고환율 기조 지속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내수기업의 경우, 환율 상승국면을 활용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환변동성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입점 등의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변동에 따른 일시적 재무 위기를 극복할 유동성 공급 지원, 환변동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외환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연동제' 안착지원이 필요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상승 국면을 수출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매출 개선 등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업 규모 간 생산성 격차 지속

'2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 29.0%, 서비스업 46.7%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2023)

〈표 4-5〉 산업별-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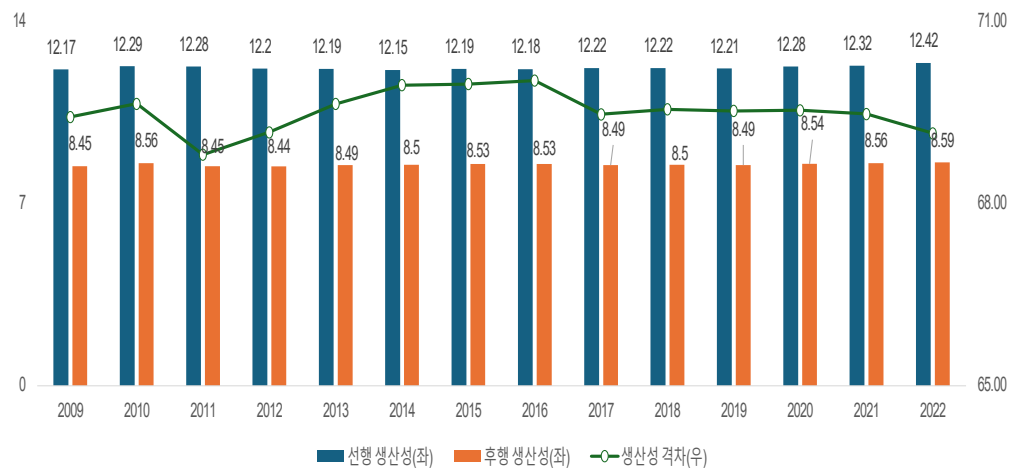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산업	대기업 생산성(A)	중소기업 생산성(B)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B/A*100)
제조업	493	143	29.0
서비스업	69.3	32.3	46.7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24);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내 선행그룹(상위 10% 이내), 후행그룹(하위 40% 이내) 중소기업 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선행그룹의 생산성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12.4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후행 그룹은 0.4% 증가에 그쳐 8.6 수준으로, 선행그룹 대비 후행그룹 생산성은 69.2%로 '20년 69.6% 대비 하락하였다.

〔그림 4-4〕 연도별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추이(중요소생산성)



* 주: 후행그룹의 자생생산성 원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OECD(2020)에 따라 추정된 연도별 평균 중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행그룹, 하위 40% 이내 기업을 후행그룹으로 정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한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OECD(2020)는 중소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33% 수준에서 OECD 평균에 해당하는 50% 까지 상승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GDP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업 그룹 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기업의 시장 점유 확대,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선행-후행기업 간 경쟁 저하로 인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창호 외, 2018).

중소기업 내 선행그룹 및 후행그룹 간 격차 확대 원인으로 전기(t-1기)의 교육훈련비와 개발비가 1% 증가할 경우, 해당년도(t기)에 중소기업이 선행그룹에 속할 확률은 각각 1.78배, 1.7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내 생산성 격차는 외부적인 환경요인보다는 혁신역량(기술직 근로자비중)과 혁신활동(교육훈련비) 등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 중소기업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선행그룹-후행그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변수	Coefficients(B)	Exp(B)
기술직 근로자 비중(t-1)	1.380	3.975
교육훈련비(t-1)	0.577**	1.781
개발비(t-1)	0.552**	1.737
산업재산권(t-1)	-0.122	0.885
거래처 규모(t-1)	-1.658	0.191
관측치	3,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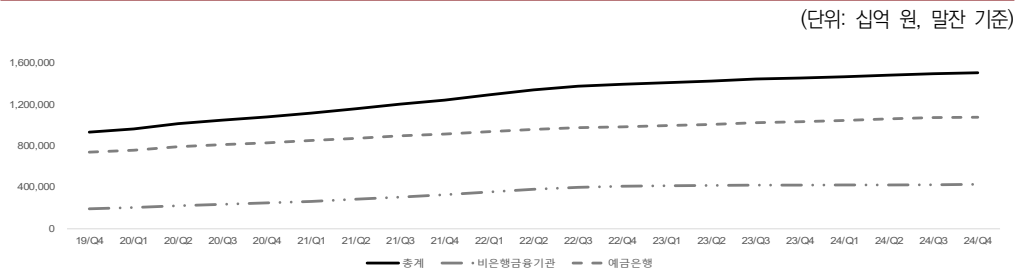
주: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변수는 1기 시차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기업규모와 기업업력, 연도더미 및 산업더미 등 통제변수 포함.

이에, 교육훈련 투자 및 기술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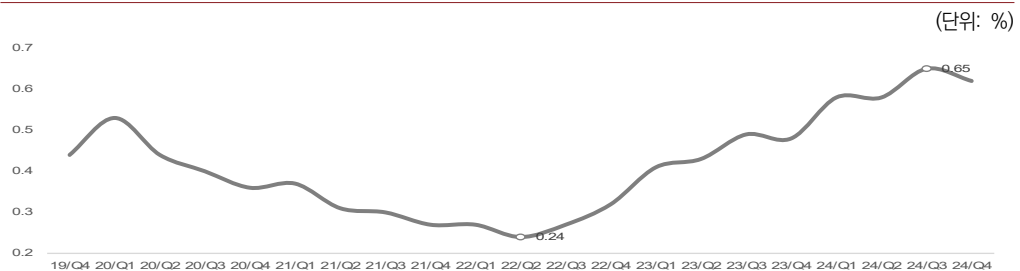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2년 3분기부터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19년 4분기 936조원이었던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2년 3분기 1,382조원까지 빠르게 증가(전년 동기대비 8.8%↑)하였으나, 성장세가 둔화되며 '24년 4분기는 1,512조원(전년 동기대비 4.1%↑)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9년 말 742조 원에서 '24년 4분기 1,08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은행 예금의 대출잔액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년 4분기(193조원) 전체 대출잔액 중 20.7%였으나, '22년 3분기 402조 원까지 증가하며 29.1%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5] 중소기업 대출잔액 추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2년 3분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되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금리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림 4-6]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신용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차입이 대기업 대비 제한적이고, 대기업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의 수가 적어 대출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Bräuning, F et al, 2021). 실제로 중소기업이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으로 ‘회사 내부자금’이 67.4%, ‘은행 차입’이 43.6%로 나타나 비은행금융차입(2.2%), 사채(1.2%), 주식/회사채발행(0.5%)와 비교하여 은행을 통한 직접금융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IBK기업은행, 2023).

중소기업의 한정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쉽게 외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대출 등의 규제가 있을 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다. 또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과 고환율로 인한 기업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정상기업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2024)은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영업 이익률은 2.11%p 및 0.55%p가 하락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전반의 생산성 하락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분석하였다.

〈표 4-7〉 한계기업 비중 추이

(단위: %)

변수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4.8	15.3	14.9	15.5	16.4
대기업	10.9	11.5	12.2	12.7	12.5
중소기업	15.6	16.2	15.5	16.3	17.4

자료: 연합뉴스(2024.9.26., 한국은행 재인용)

주: 한계기업이란 3년 이상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이에 회복가능한 한계기업을 선별함과 동시에 만성적인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한계기업의 정상화에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혁신역량(R&D) 등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연관된 요인이 유의미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송단비, 2024). 또한, 만성적인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5)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화석 에너지 활용을 강조하며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국제적 합의와 규범에 상반된 정책을 발표하였다. 반면, 2024년 12월 1일 출범한 EU 정책위원회는 탈탄소와 그린딜 정책을 담은 우선순위 정책의제를 발표하며 그간의 EU가 추진해 온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고 제조업 성장에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 지원 활용 등 친환경 정책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다(Whitehouse Articles, 2025.2.19.) 구체적으로 미국은 화석연료 활용 확대,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국제 기후 협약 및 규제 불이행, 소형 모듈 원자로(SMR)확대 등을 강조하였다(오정석·황유선, 2024).

〈표 4-8〉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구분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기초	청정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자립 및 지배력 강화
화석연료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단 연방 공유지 내 개발 엄격 제한	개발 및 증산 적극 지원
기후환경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환경보호청(EPA) 규제 강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EPA 권한 축소
원자력 발전	적극적인 원전 활용 입장	원전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SMR 개발
재생 에너지	IRA를 통해 재생공제 등 적극 지원	보조금 철회, IRA 무력화

자료: 오정석·황유선(2024)

EU 집행위원회는 2024~29년의 우선순위 정책의제를 통해 탈탄소화 및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며 친환경 정책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2040년까지 90%의 배출감소를 제안하였고,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을 시행하는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The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또한,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을 제시하며 재활용에 재료를 활용한 시장 형성으로 순환경제와 회복탄력적인 경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장영옥 외, 2024).

〈표 4-9〉 EU 집행위원회 2024-29 우선순위 정책의제

구분	내용
유럽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기업 친화적인 단일시장 확대, 탈탄소화, 에너지 가격인하, 디지털 기술 혁신, 기술과 노동 격차 해소
유럽 방위 및 안보	방위연합 구축, 공동국경 강화, 합법적인 이주 관리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공정성 보장, 형평성 증진
삶의 질 유지: 식량 안보, 물, 자연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적응 및 준비, 식량주권 확보
민주주의 가치	허위정보 근절, 법치주의 강화, 언론 및 언론인 보호,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확립
글로벌 유럽	새로운 경제외교 정책 구축, 다자주의 재편, 지정학적 필수조건으로 확대 노력
EU 예산 효율성 강화	유럽의회와 파트너십 강화, 전략적 예산 집행

자료: The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는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 수요 및 공급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관련 비용이 하락하여 원가 절감 등 단기적인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내 에너지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한 에너지자립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부품, 장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게 미국 내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는 여전히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에너지 정책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혼합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규제 변화에 대응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정책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환경 정책과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과 규제 관련 정보에 주목하고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기술수요 저하 우려에 따른 적극적인 수요 발굴 및 매칭형 기술개발 지원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비중은 '22년 11.9%로 대기업 (24.9%)대비 13.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에 대한 격차는 12.1%p('20) → 12.4%p('21) → 13.1%p('22)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4-10〉 기업규모별 신기술 기술 도입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중소기업 (5인~300인 미만)	11.1	12.1	11.9
대기업 (300인 이상)	23.1	24.5	24.9
대-중소기업간 격차	12.1p	12.4p	13.1p

* 자료: 통계청, 각연도

** 주: 신기술에는 AI, IoT,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하며 각 수치는 반올림

대-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격차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AI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측면을 볼 수 있다(봉강호 외, 2023). AI 기술도입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전체 기업은 내부 기술력 부족과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9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자금 부족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AI 및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AI 미도입사유로, 사업체에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8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중소기업중앙회, 2024.10.)

〈표 4-11〉 중소기업 AI 미도입 사유

구분	사업에 불필요	경영상 효과 의문	도입·유지 비용 부담	인력·기술 역량 부족
전체	80.7	14.9	4.4	4.0
제조업	83.7	16.9	3.4	2.2
서비스업	73.2	9.9	7.0	8.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4.10)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적인 B2B 구조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한국무역협회, 2023). 산업가치사슬 상에서 상위기업의 협력사에 위치한 경우 자사 차원의 내부 시스템 및 공정상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상위기업의 요청이 없이는 개선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의 격차 확대는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를 제한하며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신사업 확장 등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지연될 경우, 비용 절감 및 신시장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회 상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기업 규모의 장벽 극복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21).

〈표 4-12〉 중소기업 디지털기술 도입 필요성

구분	구분
신기술 도입과 제품 차별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신기술들은 제품 차별화와 공급망 통합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시간 단축과 고객 대응역량 강화
거래비용 절감 효과	디지털화는 정보 접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여주며 기업 경영의 효율화 가능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디지털 기술은 분산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리비용을 감소하여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도움
혁신 자원 및 금융 지원 확대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예: P2P 대출, ICO 등)를 가능하게 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네트워킹을 통해 인재 확보 기술 협력 촉진
개방형 혁신과 지식 확산	디지털화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기업(MNE)과의 협력으로 기술, 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 자산에 접근 가능
제도적 변화와 정부 지원	전자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대상 공공 서비스(사업 개발, 면허 발급, 세금 준수 등)가 개선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실험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자료: OECD(2021)

이에, 중소기업은 신기술 도입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기술 도입의 저해 요인인 거래 종속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교육 등 투자 확대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7) 기업 규모 간 인력난 격차 지속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10~299인)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년부터 3.0% 수준으로 대규모(500인 이상) 0.4%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23년 3.0%, '23년 0.5%로 그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표 4-13] 기업 규모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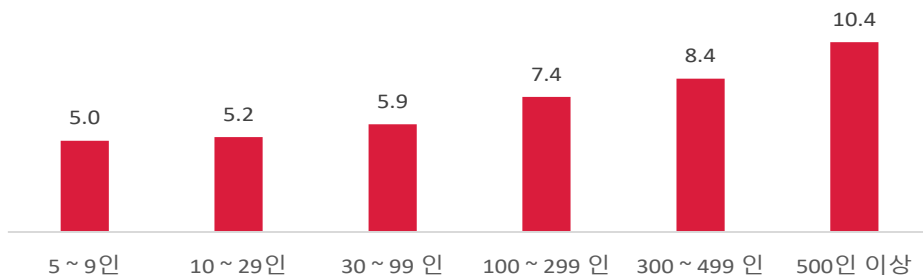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중소규모 (10~299인)	현원(A)	1,089,536	1,109,295	1,121,795	1,132,587
	부족인원(B)	33,652	34,641	35,352	35,578
	부족률 (B/(A+B))	3.0	3.0	3.1	3.0
대규모 (500인 이상)	현원(A)	464,241	466,808	471,761	476,071
	부족인원(B)	1,931	2,043	2,111	2,427
	부족률 (B/(A+B))	0.4	0.4	0.4	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각연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과 잦은 이직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평균 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5~9인 기업은 5년, 10~29인은 5.2년, 30~99인은 5.9년 등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근속년수가 평균 근속년수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4).

[그림 4-7] 2023년 기업 규모별 근속년수

(단위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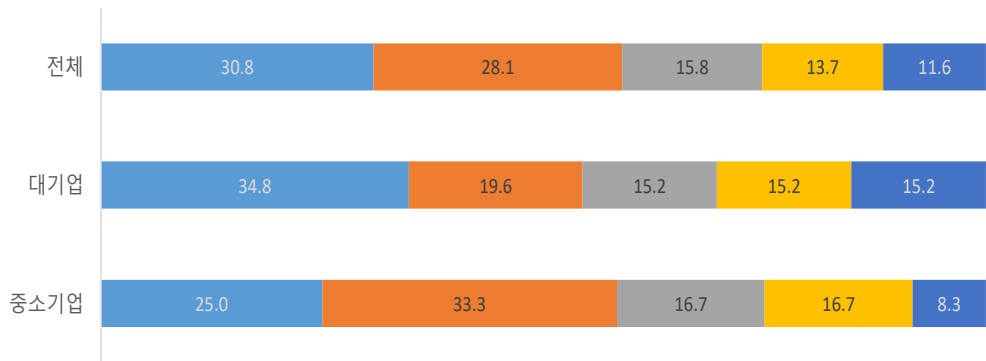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2024)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의 사유로 중도 퇴직자 증가(33.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경기 개선(25.0%), 정년퇴직자 증가(16.7%)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 경기개선(34.8%)과 차이를 볼 수 있다(한국은행, 2023).

[그림 4-8] 기업 규모별 총 채용정원 확대 이유

(단위 : %)



■ 산업경기 개선 ■ 중도퇴직자 증가 ■ 정년퇴직자 증가 ■ 코로나 19기간 감축된 인원 보충 ■ 디지털전환 및 기타

자료: 한국은행(2023)를 참고하여 재구성

주: 15개 지역본부가 2023년 11월 9~30일 중 지역경제보고서 모니터링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총 314개 업체가 응답결과

중소기업 인재 확보의 애로와 높은 이직률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욕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로 연결된다. 이는 곧 중소기업 성장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중소기업 인재 확보 및 유지 애로를 심화에 다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김기희, 2015).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와 유지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평가제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업 문화 개선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도입, 기업환경 및 문화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중소기업에서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03년 25.0%에서 '23년에는 47.8%로 증가하여 '03년 대비 22.8%p 증가하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03년 전체 취업자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0.8%에서 '24년 25.8%로 15.0%p 증가하였다.

〈표 4-14〉 5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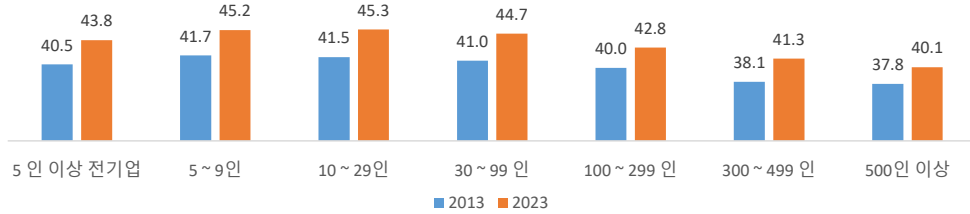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증감
중소기업 (299인 이하)	50세 이상	5,101 (25.0)	6,623 (30.3)	8,588 (37.1)	10,146 (41.8)	12,107 (47.8)	7,006 (+22.8p)
	50~59세	2,988 (14.6)	4,035 (18.4)	5,369 (23.2)	5,902 (24.3)	6,029 (23.8)	3,041 (+9.2p)
	60세 이상	2,113 (10.3)	2,588 (11.8)	3,219 (13.9)	4,244 (16.6)	6,078 (24.0)	3,965 (+13.7p)
	전체	20,428 (100.0)	21,888 (100.0)	23,118 (100.0)	24,299 (100.0)	25,329 (100.0)	4,901 (-)
대기업 (300인 이상)	50세 이상	193 (10.8)	251 (13.3)	372 (17.0)	524 (20.8)	795 (25.8)	602 (+15.0p)
	50~59세	173 (9.6)	221 (11.7)	335 (15.3)	444 (17.6)	649 (21.0)	476 (+11.4p)
	60세 이상	20 (1.1)	30 (1.6)	37 (1.7)	80 (3.2)	146 (4.7)	126 (+3.6p)
	전체	1,793 (100.0)	1,886 (100.0)	2,182 (100.0)	2,524 (100.0)	3,087 (100.0)	1,294 (-)

주 : 괄호는 전체 대비 해당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노민선(202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인용)

'23년 기준 5~9인규모 기업의 평균연령은 45.2세, 10~29인은 45.3세이고 300~499인 규모 기업은 41.3세, 500인 규모 평균연령 40.1세 등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연령이 더 높은 경향이 보였다. 평균연령 변화를 보면, 5~9인 기업은 '13년(41.7세) 대비 '23년 3.5세 증가하였고, 10~29인 이상기업의 경우 '13년(41.5세) 대비 '23년 3.8세 증가하였다. 300~499인 기업의 평균연령 변화는 '13년(38.1세) 대비 3.2세 증가하였고, 500인 이상 기업은 '13년(37.8세) 대비 2.3세 증가하여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균연령 증가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기업 규모별 평균연령 변화

(단위 : 연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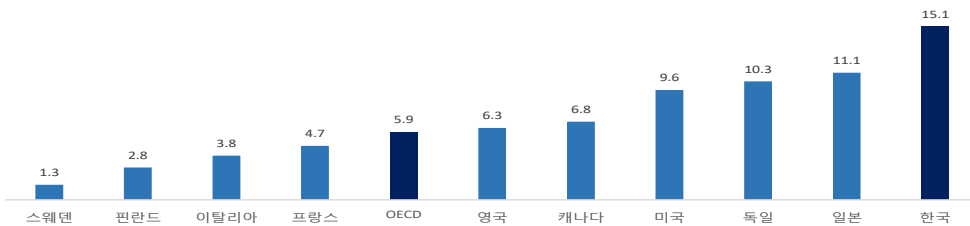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2024)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 능력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약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속년수 증가(10년 →20년)에 따른 임금 상승률은 15.1%로 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2018). 또한, 세대 간 디지털 양극화는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0.3.29.).

[그림 4-10] 국가별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률 비교

(단위 : %)



자료 : 해당 추정치는 근속년수 10년 →20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을 추정한 수치 (OECD, 2018)

중소기업은 고령 인력의 지속 고용을 통한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이에, 중소기업의 고령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디지털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령화에 따른 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등 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9)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3년 47.7%에서 2023년 30.9%로 16.9%p 감소하였다.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0.5%에서 2023년 13.5%로 7.0%p 감소하였고, 30~39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7.2%에서 2023년 17.4%로 9.8%p 감소하였다.

〈표 4-15〉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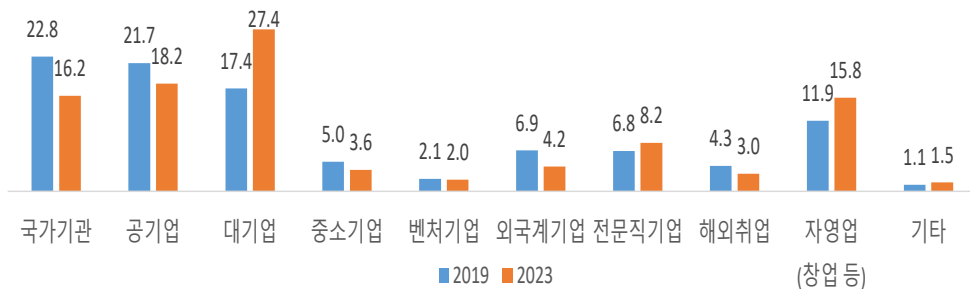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증감
청년	9,751 (47.7)	9,140 (41.8)	8,368 (36.2)	8,180 (33.7)	7,817 (30.9)	-1,934 (-16.9p)
29세 이하	4,191 (20.5)	3,693 (16.9)	3,347 (14.5)	3,468 (14.3)	3,415 (13.5)	-776 (-7.0p)
30~39세	5,560 (27.2)	5,447 (24.9)	5,021 (21.7)	4,712 (19.4)	4,402 (17.4)	-1,158 (-9.8p)
전체	20,428 (100)	21,888 (100)	23,118 (100)	24,299 (100)	25,329 (100)	4,901 (-)

자료 : 노민선(202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인용)

청(소)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5.0%(‘19)에서 3.6%(‘23)로 벤처기업은 2.1%(‘19)에서 2.0%(‘23)로 감소하여 청(소)년 인력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17.4%(‘19) → 27.4%(‘23))과 창업 등 자영업(11.9%(‘19) → 15.8%(‘23))은 증가하였다.

〔그림 4-11〕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변화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연도)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는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3년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51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434천원) 대비 34.8%수준에 그쳤다. '13년과 비교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53천원, 300인 이상 기업 287천원으로 대-중소기업간 복지비용 격차는 월 134천원('13) → 월 283천원('23)으로 10년 사이 복지비용 격차가 2배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각연도).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적 자본 축적 저해, 기술 경쟁력 정체 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윤규, 2019). 실제로, 대중소기업의 R&D 인력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의 연구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52.7%로 대기업 56.7% 대비 4%p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4-16〉 기업 규모-연령별 연구원 현황(2023년 기준)

(단위 : %, 명)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전체 연구원수
중소기업	37,058 (17.4)	75,207 (35.3)	100,773 (47.3)	213,038 (100.0)
대기업	21,334 (15.0)	59,302 (41.7)	61,580 (43.3)	142,216 (100.0)

* * 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요원을 의미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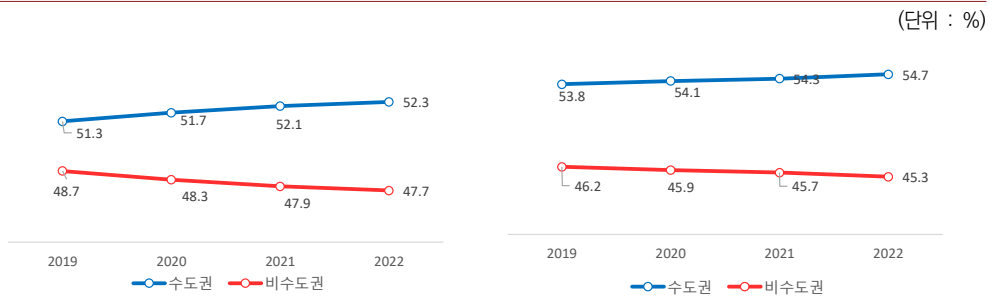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원자료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인턴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과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으로 유도하거나, 대학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고용부, 여가부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타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청년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청년인력의 수요에 부합한 유연근무 확대 적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수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19년 수도권의 기업 비중은 51.3%로 나타났으나, '22년에는 52.3%로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8.7%(‘19)→47.7%(‘22)로 감소하였다. 종업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19년 53.8%였으나, '22년에는 54.7%로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6.2%(‘19) →45.3%(‘22)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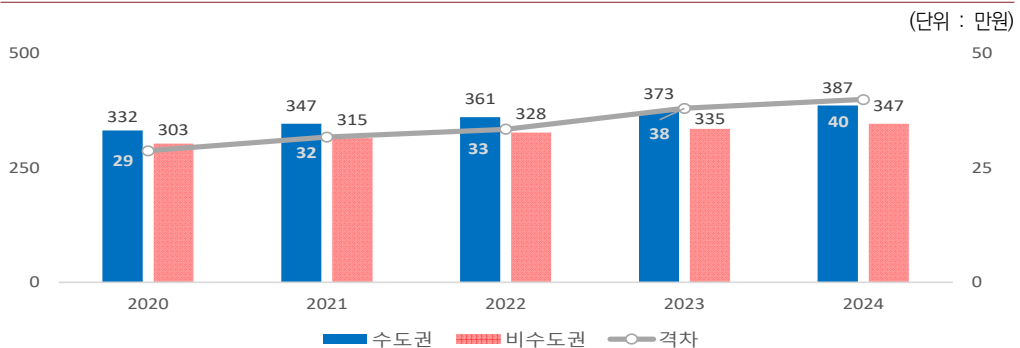
[그림 4-12] 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수(좌) 종사자 수(우) 비중 추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각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영환경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수도권 평균 월 급여는 '24년 387만원으로 비수도권은 347만원에 비해 40만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임금격차는 '20년 29만원이었으나 32만원('21년) → 33만원('22년) → 38만원('23년) 등 점차 증가하여 '24년에는 4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4-13]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평균 월 급여 추이



* 자료: 고용노동부(각연도)

수도권의 연구개발비는 '19년 전체 연구개발비 중 69.9%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2년 70.1%로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0.1%(19)에서 29.9%(22)로 줄어들었다. 연구개발인력은 수도권은 '19년 65.2%에서 66.9%(22)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8%(19)은 33.1%(22)로 비중이 줄어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연구개발투자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4-17〉 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십억 원,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연구개발비	수도권	62,226 (69.9)	64,414 (69.2)	71,388(69.9)	78,995(70.1)
	비수도권	26,822(30.1)	28,659(30.8)	30,747(30.1)	33,651(29.9)
	계	89,048 (100.0)	93,073 (100.0)	102,135(100.0)	112,646(100.0)
연구원수	수도권	350,654(65.2)	367,327(65.8)	389,627(66.4)	402,673(66.9)
	비수도권	187,482(34.8)	190,718(34.2)	197,039(33.6)	198,857(33.1)
	계	538,136(100.0)	558,045(100.0)	586,666(100.0)	601,530(10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각 년도)

수도권-비수도권간 경영환경 격차 확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지역별 주력 산업은 권역 간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역의 경제와 산업 활력 저하는 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내 주력산업에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 내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존의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기업 지원 체계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시연구 24-19]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제 5 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핵심 정책과제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중소기업의 '25년 업황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전망(SBHI), 업종별 업황 전망(BSI) 모두 '25년 1월의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수출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를 대상으로 '25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54.7%가, '25년도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 42.2%가 '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경영실적 전망의 경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높은 분야는 매출 실적(47.3%), 생산 실적(40.4%), 자금사정(43.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해외 진출지원확대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5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이슈 선정은 (1단계) 후보이슈 발굴 → (2단계) 이슈별 우선순위 선정 → (3단계) 10대 이슈 최종선정 단계를 거쳤다. 1단계의 후보이슈 발굴을 위해, '24년 뉴스기사 키워드 분석 및 '25년 전망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발굴된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통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후보이슈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정치/사회, 경영/경제, 기술/환경 등 3개 분야의 총 24개의 이슈 후보를 발굴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별된 이슈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슈별 긍정·부정 영향력 평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3단계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야별/이슈별 우선순위 및 영향력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최종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치/사회 분야의 4개, 경영/경제분야 4개, 기술환경 분야의 2개 등 10개 이슈를 선정하였다.

〈표 5-1〉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연번	이슈
1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2	고환율 기조 지속
3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5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6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7	기업 규모 간 인력난 격차 지속
8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9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10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2025년 이슈의 특징으로 인력 부족 문제 뿐만이 아닌 고령화 및 청년 인력 기피 심화 등 인력 관련 주요 이슈들이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환경에 따라 수출, 환경정책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이슈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 간 인력, 혁신, 생산성 등의 격차가 점차 확대 또한 2025년 10대 이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에 정보제공 및 공·부정 영향분석에 기반한 전략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2 핵심 정책과제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투자 및 R&D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직원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투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중소기업의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I 등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 분야의 경우 기존의 스마트공장에 AI 자율제조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상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을 다각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일시적인 재무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금리 상품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만성적인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평가제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업 문화 개선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으로 유도하거나,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 생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청년인력의 수요에 부합한 유연근무 확대 적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고령화 관련, 정년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노사 합의를 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인상으로 무역 장벽 강화, 특정산업 보호조치를 통해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EU, 중국 등 주요국 대응을 유발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긍·부정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수출리스크 관리 지원 확대, 중국-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무역 분쟁 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각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보고서」.
- 고용노동부(각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각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김기희(2015), 대전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연구보고서 2015-02
- 김성록 외(2019), 지역연계형 산업정책을 위한 산업구조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1-15.
- 노민선(2024),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박가열 외(2023),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분석, 기본사업 2023-062, 한국고용정보원.
- 봉강호 외(2023), 국내 인공지능(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SSUE Report, IS-164.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4), 「2024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 IBK기업은행(2023), 「2023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 오정석·황유선(202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 이효영(2024), '트럼프 귀환'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제 통상환경 전망, IFANS Focus, November 13, 2024
- 송단비(2024),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 컨퍼런스 발표자료(2024.11.28.).
- 오선주 외(2024),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 Samil Insight(2024.12),
- 오정석·황유선(202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국제금융센터 (2024.11.13.)

윤윤규(2019), 청년고용의 현실과 정책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장영옥 외(2024),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7(31).

중소기업중앙회(각연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2024.10),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2023.8.),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각연도),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각연도), 「중소기업 수출동향」.

최창호 외(2018), 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8-4호.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14.)」

통계청(각연도), 「기업활동조사」.

통계청(각연도), 「사회조사」.

한국무역협회(2023), 「국내외 기업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비교와 시사점(2023.3)」.

한국무역협회(2025.2.10.),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Trade brief No.0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각연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원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24), 「2024 제조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한국생산성본부(2024), 「2024 서비스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한국은행(2022),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12월)」.

한국은행(2023),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한국은행(2024),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한국은행(각연도), 「기업경기조사(전망)」.

한국은행(각연도), 「경제통계시스템」.

한아름(2024),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KITA 통상리포트, vol. 13.

홍성철 외(2022), 2022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현안 및 정책 동향, 중소기업연

구원.

연합뉴스 보도자료(2024), “‘계엄사태’발 고환율에 산업계 초긴장…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연합뉴스 보도자료(2024.9.26.), “한계기업 비중 추이”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2022.8.29). “최근 환율급등,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1.23.), 「2024년 중소기업 수출, 1,151억달러 기록(4.9%)」.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data.krx.co.kr/contents/MDC/EASY/visualController/MDCEASY300.cmd>
(검색일: 2025.01.03.)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0.3.29.), 한국, 디지털 접근성은 最高, 기업의 디지털 역량은 하위권

Bräuning, F., J. L. Fillat, and G. Joaquim(2021), “Corporate Finance and the Transmission of Shocks to the Real Economy”,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21-18,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European Commission web site

OECD(2018), Working Better with Age: Japan.

OECD(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2021),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OECD(2023), OECD Review of Innovation Policy Korea

The Wahington Post(2024.1.27.), Donald Trump is preparing for a massive new trade war with China.

Whitehouse Articles(2025.2.19.),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Paves Way for Unleashing American Energy.